

#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동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2022. 9. 1.

행 정 재 무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장 영 교

### 1. 제안요지

- 가. 의안번호: 제1797호
- 나. 제 출 자: 성동구청장
- 다. 제출일자: 2022. 8. 17.
- 라. 회부일자: 2022. 8. 23.

### 2. 제안이유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이 일부개정(2021.10.19.) 및 시행(2022.4.20.)됨에 따라 조례위임 사항을 정비하여 상품권 발행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상품권의 발행·판매, 충전·환전, 가맹점 관리 및 운영 시스템 관리 대행 사항 규정 정비(안 제2조, 안 제6조, 안 제10조, 안 제11조)
- 나. 상품권운영자금의 보유·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4조의2)
- 다. 가맹점 및 사용자 정보에 대한 관리 책임 규정 신설(안 제5조)

라. 가맹점 등록 제한 단위 세분화(안 제6조)

마. 판매대행점의 상품권 잔액 환급 기준 정비(안 제9조)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별첨

다. 기      타

- 1) 입법예고(2022. 7. 7. ~ 2022. 7. 27.)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결과, 신설·강화 규제 없음
- 3)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4)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5)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5. 검토의견

가. 제안 취지

-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운영대행사 관련 규정 삭제, 가맹점과 사용자 정보에 대한 관리책임 등을 명확히 하여 상품권 발행 및 관리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임
- 우리 구는 지역자본 선순환을 통해 침체된 골목경제를 살리고 지역소비를 촉진하고자 2019년 12월에 제정된 「서울특별시 서울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2020년 1월 성동사랑상품권을 출시하여 발행·유통중이며 2021년 5월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동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

#### 나. 주요 개정내용

- 안 제2조, 제6조, 제10조, 제11조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판매대행점이 운영대행사의 역할을 통합해서 관리하게 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 당초 성동사랑상품권은 제로페이 사업을 전담하는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을 상품권 운영대행사<sup>1)</sup>로 하고 제로페이 참여사인 ‘비즈플레이’에 판매대행점<sup>2)</sup> 업무를 이원화하여 협약을 체결함
- 2022년 성동사랑상품권은 국·시비를 매칭하여 진행된 사업으로 서울특별시(대표기관)와 25개 자치구(관련기관)가 공동협의체를 구성 후 공모를 진행하여 판매대행점과 운영대행사를 통합하여 운영이 가능한 판매대행점[신한컨소시엄: 신한카드(주)사업자), 신한은행, 카카오페이, 티머니]을 선정 후 서울시가 대표기관으로 협약을 체결함

---

1) 운영대행사: 구청장과 협약을 체결하여 상품권의 발행·유통·시스템 관리 및 운영,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업체

2) 판매대행점: 구청장과 협약을 체결하여 상품권의 판매·충전·환전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전자 금융거래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회사와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전자금융업자

- 또한, 가맹점 등록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고지하도록하여 등록 진행 상황에 대한 신청자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 신청절차의 지연을 방지하도록 함
- 안 제4조의2에서는 상품권 자금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원칙적으로 구 계좌로 관리하고 예외적인 경우 신탁업자와의 계약체결을 통해 관리하며, 계약체결 주체는 구청장 또는 서울특별시장<sup>3)</sup>으로 하도록 상품권 운영자금의 보유·관리에 관한 사항과 반기별로 상품권 운영자금의 보유·관리 현황을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관련 사항을 신설함
- 이는, 상품권의 발행규모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상품권 이용자의 예탁금과 운영자금에 대한 안정적인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른 조치로 판단됨

## □ 연도별 상품권 판매 및 가맹점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별	발행액	국비	시비	구비	할인율	가맹점수
2022	37,720	554.4	1,663.2	1,554.4	10%	9,322
2021	49,000	980	2,940	980	10%	12,600
2020	17,100	-	2,223	342	7~10%	.

3) 상품권 할인액 7% 중 서울시 지원 5%임에 따라 계약체결 주체에 서울특별시장<sup>3)</sup>이 포함 됨

- 안 제5조에서는 판매대행점의 위탁사업에 따른 가맹점 및 사용자 정보에 대한 관리책임 규정을 신설하여 수집된 정보의 처리 기준을 정하고자 관련 규정을 신설하였고
- 안 제6조에서는 가맹점 등록 제한을 업종 단위 외에 사업체 단위로 세분화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안 제9조에서는 판매대행점의 상품권 잔액 환급 기준을 지류나 카드 형태로 발행되지 않고 1만원에서 70만원의 범위에서 모바일 형태로 발행하고 있어 별도의 권면금액을 설정할 필요가 없어 구매건별 구매금액으로 변경하여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

#### 다. 종합 검토의견

- 본 개정안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개인정보 보호 등 상품권 운영과정에서 도출된 제도상의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보완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상품권 발행 및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한 개정안이라 판단됨
- 다만, 조례 제·개정 시 상위법령에서 조례에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 외에 법령에 규정한 사항까지 조례에 재기재할 경우 상위법령을 개정할 때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입법경제성이 떨어짐<sup>4)</sup>과 더불어 상위법이 개정되었으나 조례를 개정하

4) 법제처 ‘2018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참조

지 않음으로 인해 상위법과 상충하는 규정들이 발생하는바 앞으로는 조례 제·개정 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 관 계 법 규 ＞

<b>붙임 1</b>	<b>「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b>
-------------	--------------------------------

**제4조의2(지역사랑상품권의 자금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자가 지역사랑상품권을 구매하기 위하여 지급한 자금, 유효기간 내에 사용되지 않고 남은 지역사랑상품권 금액 및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 등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판매·환전하기 위한 자금(이하 “상품권운영자금”이라 한다)을 보관·관리하기 위한 계정을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상품권운영자금을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계정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 협의를 거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와의 신탁계약 체결 등을 통하여 안정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반기별로 상품권운영자금의 보유·관리 현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가맹점의 등록)** ① 제4조제3항에 따른 유통 지역 내에서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맹점을 하고자 하는 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등록 신청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맹점 등록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1.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행산업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불법사행산업을 영위하는 경우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의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영위하는 경우
3. 이 법의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업종이나 사업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등록 제한업종이나 등록 제한사업체를 영위하는 경우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맹점 등록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 신청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반기별로 가맹점 등록 현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⑤ 가맹점의 자격 요건, 등록 기준 등 가맹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8조(가맹점 등록의 취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맹점 등록을 한 경우
2. 제7조제2항제3호에 따른 등록 제한업종이나 등록 제한사업체를 영위하는 경우
3. 제10조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자가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가맹점으로 재등록할 수 없도록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경우 그 사실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 등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제15조(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판매·환전 등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범위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을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이용 편의를 개선하기 위하여 전산관리시스템 구축 및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